

IIRI Online Series

신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방향

진 창 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2022. 5. 9

신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방향*



진 창 수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에 이어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신정부의 구상대로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일본은 여전히 “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여 윤 당선인의 결단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강하다. 즉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 신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지금도 일본 자민당은 한국에 거는 기대보다는 불신이 앞서는 상황이다.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한국 불신을 증폭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 보수 정부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중론이다. 즉 한국의 보수 정부는 진보 진영의 친일 프레임 공격에 취약하여 오히려 한·일 대립을 격화시킨 예도 많다고 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보여준 독도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 거부하는 이러한 일본 내 시각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민당 내 분위기는 윤석열 당선인에 호응하여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일본 국민들도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 이 글은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에 긴 호흡 필요”, 『뉴스1』(2021.04.24.)과 “한일관계에서 과도한 기대는 금물”, 『동아일보』(2021.04.26.)를 발췌, 수정하였음.

최근 일본 자민당의 한국에 대한 불신은 기시다 총리와 강경파 간의 갈등과도 연관되어 있다. 아베 전 수상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기시다 총리가 아베의 유산을 뒤엎는 것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강경파의 우려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대신의 임명에서 시작되었다. 하야시 외무대신은 기시다 총리와 같은 파벌인 고치카이(宏池政策研究会)의 일원으로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또한, 한국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도 유지하면서 친한파로 알려져 있다.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는 아베의 라이벌인 하야시 외무대신을 기용함으로써 외교에서 아베 전 총리와 차별성을 갖고자 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와 아소 부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야시 대신을 임명하면서 기시다와 아베의 갈등은 불이 붙었다. 그 후 아베는 작심한 듯이 방위비 증강을 포함해서 적기지 공격능력, 그리고 지금까지 금기시되었던 핵공유조차 서슴없이 주장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등록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결정을 번복시켜 기시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한·일관계에서도 아베의 “사죄와 반성은 없다”는 주장이 일본 정치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 타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매우 작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일본에게만 요구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신정부는 전임 정권들의 대일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서두르다가 국내적 합의를 무시하여 역풍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 “털끝만치도 반성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한국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킨 아베 총리,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와의 소통을 경시한 문재인 대통령, 한국과 정상회담조차 거부한 스가 총리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한·일 정상들의 정책 실패는 결국 반일과 혐한으로 한·일 대립을 부추겨 ‘국익을 위한 전략외교’는 약화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우선 실질적 대화 재개를 위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어야 한다.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양국 정상들의 의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술에 배부른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한·일관계에서는 반드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 정부는 박근혜-아베 정부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가면서 신중하고 천천히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도 당장 한국의 ‘강제징용문제 해결 제안’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일본 정치권은 강제징용 문제를 윤 당선인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일 갈등은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일본의 협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내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한국 정부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는 결국 한국이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게다가 국내 대일 강경 시민단체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서두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해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화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해묵은 과거사의 늪에 빠져 현재 국익의 손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관계의 대응에서도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까지 대북문제와 중국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전략 차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문 정부 하에서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던 한·미·일 협력이 신정부에서는 탄력을 받게 되었다. 신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중시하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관계에서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신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대일정책의 목표는 한·일의 특수한 양자적 관계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공통과제를 해결해 가는 자세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 경우 한·미·일 협력 틀은 유용하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핵/미사일 대처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대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의 공동대처를 통해 국제관계의 강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내 국제관계의 규칙 기반 질서에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반대하면서, 중국을 국제관계의 일원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신정부는 국제

적인 협력과 더불어 한·일 정부 간 갈등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교류를 하루빨리 활성화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민간 교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일 비자 면제 협정을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한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으로 윤 정부는 대일정책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과거사 문제 해결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그림을 구체화해야 한다.

저자 소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도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와세다, 고베 및 도쿄대학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현대일본학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치분과위원회 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내 외교·안보 분야 대표적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제9대 소장을 역임하였다(2015~2018). 진창수 센터장은 한일관계, 북일관계 및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등 일본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 왔으며, 최근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일본 아베정권의 보수 우경화 - 아베정권과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중심으로』(2002), “정체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든 일본연구”, 『일본연구논총』, 51호(2020), “최근 일본의 대외 정책과 한·일관계”, 『외교』, 제132호(2020) 등이 있다. (Email: jincs@sejong.org)